

2021년 05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71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정책동향

2021년 05 (Vol.71)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박소현
발행일	2021년 6월 1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김영현, 송유미, 이경신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845
이메일	ymso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4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행복청, '21년 공동주택 공급계획 발표

국토부,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대전시, 2021년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기반 스마트도시
대전 조성 실행계획' 수립

충북도,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7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착수

국토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 차질없이 추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해수부, '어촌유희시설 활용 海드림 사업' 대상지 5개소 선정

국토부,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841건 선정

과기부, 2021년도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사업' 착수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1호 준공

부산시, 시민주도로 온실가스 감축하는 저탄소 마을 16곳 선정
부산시, '고령친화마을(정든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산시, 「2021년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 공모 선정
인천시,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전설명회 개최
인천시, '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 추진
인천시, '공공주도 3080+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전남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제주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준비 완료
제주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및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보급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 추진
제주시, '2021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19

인천시,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 착수
광주시, '광주 도시·건축 선언' 이행 위한 매뉴얼 발표
경남도 '스마트 공간정보 기반(플랫폼)' 시범구축 사업완료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1년 05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건축·도시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1.05.03.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4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41일간, 행정예고는 ‘21.5.24.까지) 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제·개정안 주요내용]

주요 내용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1.05.18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주요내용]

분 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정 의	공공시행·대행 조합원분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 지분형주택 공급 (전체세대의 20%는 공공임대-서울기준)	공공시행·대행 기존세대의 1.6배 신축
용적률 완화	법적상한의 120%까지 건축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완화용적률의 20~50%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기부)	완화용적률의 40~70% (국민주택규모 임대·분양주택 기부)
절차 간소화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 통합심의	
기 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신설	공원녹지 설치비용 완화

건축·도시분야 계획추진 동향



행복청, '21년 공동주택 공급계획 발표

도시공간건축과. 2021.05.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1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1년은 총 6,637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되며, 하반기에는 기 공급6-3 H2·H3(1,350세대)를 제외한 5,287호의 공동주택이 공급 예정이다.

하반기 공급물량은 공공분양, 민영주택, 민간참여공공분양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주택 4,242호와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주거복지를 고려한 임대주택 1,045호로 구성된다.

국토부,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공간정보진흥과. 2021.05.16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공간정보산업을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17일(월) 확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최근의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트윈·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을 지원하고 공공·민간의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25년까지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13조 원,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 7위권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추진전략) ①기업 맞춤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②공간정보 유통·활용체계 선진화 ③미래 핵심기술 개발 및 융복합 인재 육성

** (추진과제) ①창업기업 발굴지원 ②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③사업 대가기준 개선 및 전문 감리방 안 마련 ④해외 진출 역량 강화 및 사업 수주 지원 ⑤맞춤형 데이터 지원 및 유통 활성화 ⑥위성 정보 활용 융복합 서비스 창출 지원 ⑦데이터 표준 개발 선도 및 적용 확대 ⑧보안규제 완화를 통한 정보 유통환경 개선 ⑨디지털 트윈 분야 신기술 개발 ⑩R&D 추진체계 강화 및 성과 확산 ⑪신산업 지원을 위한 융복합 인재 육성 ⑫취업·고용 매칭을 통한 일자리 지원 강화

대전시, 2021년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기반 스마트도시 대전 조성 실행계획' 수립

스마트시티과. 2021.05.03



대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2021년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도시 대전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4.30일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스마트도시 대전 조성 실행 계획'은 지능형 서비스 향유도시, D.N.A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등 2개 전략 8개 분야 54개 과제를 제시했고, 이를 위해 24년까지 총 4,7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비전 및 목표]

비전	
D·N·A 기반 스마트시티 대전 조성	
목표	
■ 시민 삶의 변화 ■ 데이터중심 도시 ■ 4차산업혁명 특별시 도약	
추진전략	추진과제
〈시민서비스〉 지능형 서비스 향유도시	1. [스마트 교통]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 2. [스마트 안전] 신속하게 대응하는 재난 안전 3. [스마트 경제] 스마트한 경제·산업 활력 기반 조성 4. [스마트 환경] 쾌적하게 관리되는 환경 5. [스마트 행정] 모두에게 열려있는 행정
〈기반조성〉 D·N·A 기반의 스마트시티	6. [D (데이터)] 유용한 데이터가 흐르는 도시 7. [N (네트워크)] 촘촘한 인적·물적 연결 도시 8. [A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반 도시

충북도,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건축문화과. 2021.05.11



충청북도는 10일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건축 정책 비전과 전략목표, 부문별 전략과제를 마련해 충북도 향후 5년간(2021~2025년)의 건축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은 ‘포용·혁신·통합의 충북 건축문화 공간 조성’을 비전으로 ①안전과 행복의 포용적 공간창출 ②미래지향적 기술중심의 건축 실현 ③도시·건축의 통합적 공간관리를 3대 전략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실천과제와 세부 사업계획 등을 담았다.

충북도는 공청회 결과와 함께 오는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아 계획에 반영한 후, 6월 도의회 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공청회]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착수

도시경제과. 2021.05.05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우수 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인증을 위한 평가는 운영기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정량, 정성지표)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6월말(6.28~30) 지자체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하여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장관 표창과 동판 수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스마트 도시 지표(대분류)]

지표	내용
혁신성	공공 및 민간·시민 역량과 정보공개 및 데이터 활용·연계 등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역량 및 환경을 평가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평적 문제해결 및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지역(스마트도시 추진체계, 제도 기반, 네트워크 구성 등에 거버넌스적 요소 적용)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스마트도시 기반요소(지능화시설 및 서비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로서 서비스 기술이 각 지자체 여건에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역

국토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 차질없이 추진

공동주택지원과. 2021.05.06



국토교통부는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 방안이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호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하며, 3~4인 가구에게는 중형 평형 위주의 “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금년 3.8만호, 내년 4.2만호 등 총 8만호(서울 3.2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

구분	공급유형별 특징	총계	‘21년	‘22년
		8만호	3.8만호	4.2만호
①신축 매입약정	- 청년신혼다자녀가구 대상, 신축주택 공급	4.4만	2.1만 (1.8)	2.3만
	- 입주자 선호 설계·구조 반영			
	- 시세 50% 이하 저렴한 임대료			
②공공 전세주택	- 3인 이상 가구에 중형 신규주택 공급 (전용 50㎡ ¹)	1.8만	0.9만 (0.96)	0.9만
	- 소득·자산요건 미요구(경쟁 시 추첨)			
	- 시세 90% 이하 ‘전세’(최대 6년 거주)			
③비주택 리모델링	- 1인 청년가구 위한 신규주택 공급	1.8만	0.8만 (0.3)	1.0만
	- 공유공간 활용,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시세 50% 이하 저렴한 임대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새만금개발청. 2021.05.07



새만금개발청은 5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내 공유수면을 대상지로 하는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적인 첨단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주도 투자사업에 대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를 투자혜택(인센티브)으로 부여하는 사업모델이다. 이번 공모는 복합개발용지에 공공이 주도하는 수변도시 조성에 이어 실시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대상으로 7월 중 종합평가를 시행해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수부, '어촌유희시설 활용 海드림 사업' 대상지 5개소 선정

어촌어항재생과. 2021.05.17



해양수산부는 '어촌유희시설 활용 海드림 사업'(이하 '해드림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를 통해 2021년 사업대상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경기 화성 궁평마을, 전남 강진 사초마을, 전남 고흥 서촌마을, 전남 고흥 익금마을, 경북 경주 읍천항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 특화형 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해드림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촌지역에 있는 시설 중 최소 2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이나, 준공일로부터 15년이 지나 기능과 안전성 악화로 유희화가 진행 중인 건축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부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5개소를 선정하고 개소당 리모델링 비용 3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토부,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841건 선정

녹색건축과. 2021.05.25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건축물 841건(총 사업비 2,948억원, 국비 2,130억원 규모)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특히, 각 광역지자체별 대표 사업지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하여, 공사비 추가 지급이나 기술자문 등을 통해 지자체가 우수한 성과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의소, 의료시설)을 그린리모델링하여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21년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841건은 용도별로 어린이집 399건, 보건의소 384건, 의료시설 58건이고, 권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202건, 비수도권 639건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2021년도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사업' 착수

디지털사회기획과. 2021.05.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농어촌으로 확산하기 위한 2021년도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2019년부터 '농촌중심지 활성화 착수지구'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농·어촌의 ①생산성 향상, ②안전강화, ③생활편의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총 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어촌에서 절실히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4개의 신규 과제 공모와 함께, 기존의 우수한 서비스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1개의 확산과제를 신설하여 총 5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신규과제로 선정된 4곳은 전남 신안군(도초면), 경남 창원시(동읍), 전남 장성군(황룡면), 경남 거제시(남부면)로, 지역별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실증할 계획이다.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1호 준공

녹색건축과. 2021.05.28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으로 쌍류 보건진료소‘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20.7월 추정 확보를 통해 전국 195개 지자체 공공 건축물 834동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착수하였으며, 각 시도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추천받아 총 32개 사업(시도별 1~2개씩)을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쌍류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도신고북로 427	
규모	연면적 : 151㎡, 층수 : 지상 2층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보건소)	
준공년도	2002년	
공사내용	단열 및 창호보강, 강제환기장치, 냉난방기 및 태양광패널 등	
사진		
		
		
		
	그린리모델링 전	그린리모델링 후
	고효율창호	폐열회수환기장치
		LED 조명

부산시, 시민주도로 온실가스 감축하는 저탄소 마을 16곳 선정

기후대기과. 2021.05.12



부산시가 시민주도형 참여와 마을공동체 자율적 삶의 방식 변화를 통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토록 하는 「부산형 저탄소 마을」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부산형 저탄소 마을사업: 산업부문보다 비용은 적게 들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비산업부문 사업으로 마을주민 모두가 생활 습관을 조금씩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지원하는 사업

저탄소 마을로 선정되면 3년간 저탄소 생활 실천 사업을 위한 보조금과 마을활동가 지원을 받으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

[단계별 사업내용]

단 계	내 용
1단계 : 인식증진	- 가구별 에너지 절감목표(5~10%) 설정·관리 및 마을공동체 조직 결성 - 기후변화교육, 워크숍, 절약경진대회 등 마을 절약활동 지원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통한 자원절감 및 생산방안 제시
2단계 : 효율개선	- 주택 효율화 상담·시공 교육(단열, 보일러 청소, 절수설비 등) - 마을내 전문인력 양성 및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 ※ LED조명 교체, 단열창호, 주택출입구·외피(벽, 천장) 단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3단계 : 탄소제로	- 신재생에너지(미니태양광 등)·빛물이용시설 등 설치 - 탄소흡수원 확충(나무심기 등), 협동조합 결성 등 마을기업 육성

부산시, '고령친화마을(정든마을) 조성사업' 추진

노인복지과. 2021.05.27



부산시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마을 주민들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고령친화마을(정든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든마을 조성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과 전 세대가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동(洞)별 특화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고령친화적인 인프라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에서 건강과 돌봄, 여가 등이 결합된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 누구나 올 수 있는 사랑방 공간으로 재탄생이 기대된다.

부산시, 「2021년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 공모 선정

관광진흥과 . 2021.05.31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모 「2021년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에 부산 용두산 공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은 지역 공공시설(공원 등)을 기반으로 문화기술 연구개발과 기술실증을 통해 공공인프라를 첨단화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시는 이번 공모로 국비 49억원을 확보해 2023년 12월까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기반 확장형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용두산공원을 가상현실로 구현하고, 2년 간 실증을 통해 용두산 공원을 첨단공원으로 재탄생 시킬 계획이다.



[용두산 공원 실감 콘텐츠 실증 예정 이미지]

인천시, ‘스마트도시 리빙랩’ 사전설명회 개최

스마트도시담당관 . 2021.05.02



도시
정책

인천광역시시는‘2021년 시민참여 인천 스마트도시 리빙랩’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혁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4월 30일 동구 연수구·미추홀구의 ‘스스로해결단*’과 함께 리빙랩 사전 설명회(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 주민, 지자체, 연구자, 기술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참여·협업해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해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실행 조직

시는 특화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3월 동구 스마트한 슬기로운 어린이생활 플랫폼 설계, 미추홀구 ICT활용 배달 일회용기 절감·대체시스템 설계, 연수구 장애인 전용 주차차구역 무인단속 시스템 설계 등 3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각 구별 스스로해결단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과제 운영에 앞서‘스스로해결단’을 대상으로 리빙랩 이론 및 방법론, 우수사례를 제시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빙랩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인천시, ‘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 추진

주거재생과 . 2021.05.04



주택
정책

인천광역시시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4일 업무협약을 갖고 소규모 신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집 공간채움 프로젝트’는 지정기부 모금으로 소규모 신축 영구임대주택에 불박이 생활가전을 건축설계 시부터 반영해 설치·시공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모금회는 사회기여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해 참여를 유도하고 지정기부 모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인천시는 건축설계 단계부터 불박이 소형 생활가전 설치에 대해 계획하고 시공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방식이다.

인천시, '공공주도 3080+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재생정책과. 2021.05.26



인천광역시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로 미추홀구, 부평구 2개구 총 3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2월 4일 정부에서 발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후보지별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유형별로 각각 후보지를 제출했으며, 지난 4월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유형 및 소규모정비사업유형으로 3개소가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 사업 후보지는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으로 공공주택특별법(국회 입법 진행 중)에 의해 추진되며, 기본적인 입지요건(범위, 규모, 노후도)을 고려해 선정된 지역이다. 역세권 사업은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및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자체개발 대비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1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공공사업시행자) 협의를 통한 규제완화(용적률 등),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남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건축개발과. 2021.05.13



전라남도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들기 위해 화재 취약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대상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 건축물이다. 지원 내용은 건축물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및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이다.

건축물 관리자(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4천만 원을 기준으로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2천60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준비 완료

디지털융합과. 2021.05.11



제주도는 지난해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에 이어 올해 본사업*에서는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절차를 진행했으며, 고도화에 따른 추가 서비스 모델을 수행할 기업을 선정했다.

* 스마트허브 기반 그린 모빌리티 활용성 증대, 신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에너지 커뮤니티 구축, 스마트 안전망 구축의 세부과제 아래에 시민주도형 'e-3DA'미래생활도시 구축을 목표

제주도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체계적인 사업계획 마련 등을 위해 5월중 참여기업(기관) 19개가 모인 가운데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총 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해 신재생 에너지와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한 공유 모빌리티를 연계하는 시민 주도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유소의 기존 산업 전환형, 편의점·마트의 생활밀착형, 지역 거점형 등 총 21개소의 스마트허브를 구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및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및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보급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 추진

디자인정책팀. 2021.05.25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보급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연계성 없이 추진되어온 개별적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업을 종합해 모범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가로환경시설물을 정비하고 통합 개선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실증사업: 제주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확산을 통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생활형 공공디자인 보급 사업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한라수목원길 내 유니버설디자인(범용디자인)을 접목한 안전하고 식별성 있는 보행로 정비와 간결한 안내표지판 설치,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 난간 및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로 실용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제주도는 연차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개발’을 통해 마련된 음수대(3개소)와 연립통합 안내표지판(8개소)을 조천읍과 표선면 등 제주 곳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음수대 및 연립통합 안내표지판]

제주시, '2021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

건축지적과. 2021.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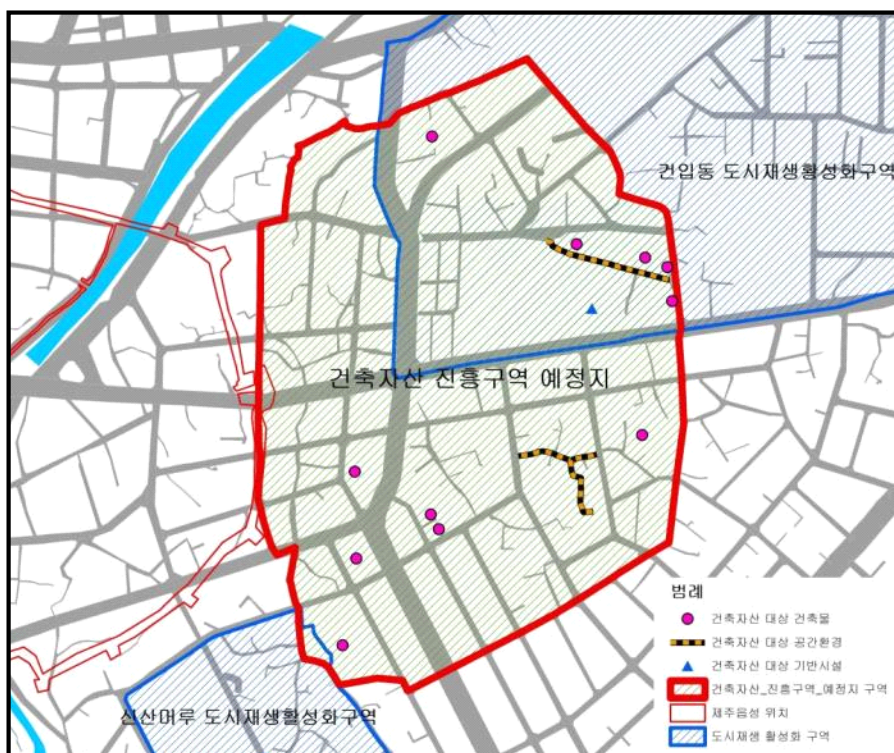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 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과 우수건축자산 등록·활용 지원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제주도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지원 중 진흥 구역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분야에 선정됐다.

진흥구역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분야에 선정된 지역은 옛 제주읍성 동문 밖 주변 일대로 동문 흔적과 옛길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앞으로 공모 선정된 지역에 대해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진흥구역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진흥구역 조사 예정지]

인천시,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 착수

건축계획과, 2021.05.27



인천광역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구현하고, 시·군·구와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 간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한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전용 소통창구가 부재하고, 아파트 단지 관리업무가 수기 결재 및 종이문서 형태로 관리되고 문서 미공개에 따른 입주민간 분쟁과 불신이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시민들이 제안해 추진 되는 주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인천시 관내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업, 정보 등을 신속하게 받아보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전용 종합포털 홈페이지와 아파트에서 생산·관리되는 종이문서를 전자화하고 입주민 공개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다.

시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에서도 질문 및 답변·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며, 자치구와 아파트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용 채널과 문서 수발신 및 회람, 재난정보 발령 시 상황전파 시스템 기능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금년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대시민 홍보와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대표 등 아파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내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보급·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광주 도시·건축 선언’ 이행 위한 매뉴얼 발표

도시계획과, 2021.05.06

완료

도시
정책

건축
정책

광주광역시시는 6일 ‘광주 도시·건축 선언’ 이행을 위한 매뉴얼을 발표하고 광주다운 도시·건축 실현 방안을 밝혔다.

매뉴얼은 광주시가 수립 중이거나 수립키로 한 도시기본계획, 건축기본계획, 경관 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안전관리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65개 법정·비법정계획, 조례, 지침, 정책연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건축선언이 추구하는 가치와 계획, 목표를 담은 매뉴얼의 내용을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총 10개 조문별*로 계획목표,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사업, 추진체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추진 과제별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고, 특히 추진부서와 일정을 명시해 이행 책임 주체와 로드맵을 알 수 있도록 했다.

* 역사와 미래, 안전과 공존, 마을과 공동체, 교통과 도로, 경관과 조망, 녹지와 공원, 집과 건축, 공공시설과 공공건축, 공동주택과 주거 인프라, 공공성과 도시 행정

아울러 이행 성과관리를 위해 시민사회, 의회, 광주시가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건축정책위의 검토를 거쳐 2년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광주 도시·건축 선언 이행을 위한 매뉴얼 발표식]

경남도 '스마트 공간정보 기반(플랫폼)' 시범구축 사업완료

디지털도로팀. 2021.05.02

완료

국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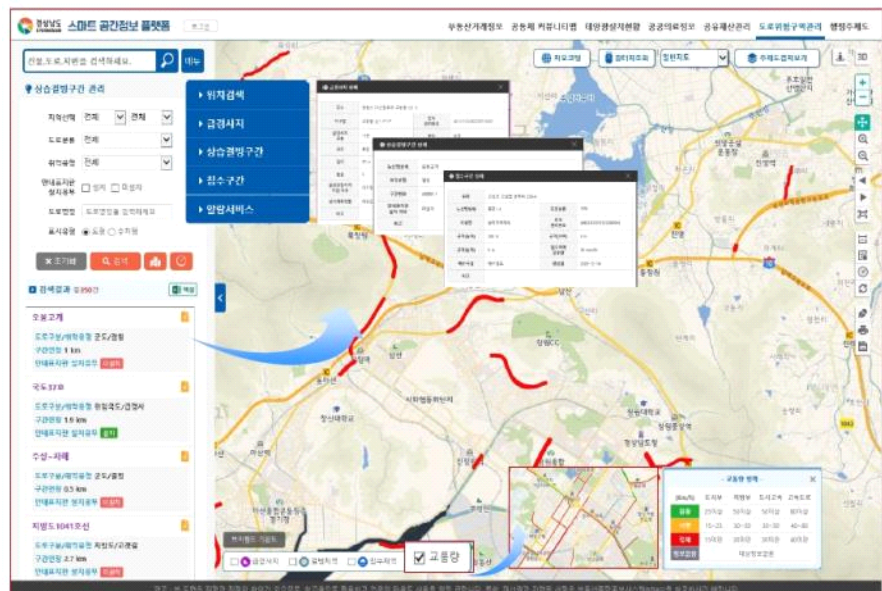
경상남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스마트 공간정보 기반 시범구축 사업’의 1단계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시범구축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서비스 구축, 공간정보 기반의 5개 활용모델(공동체 커뮤니티 맵, 태양광 설치 현황, 공공의료정보 제공, 공유재산 관리, 도로위험구역관리 서비스 구축),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분산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연계해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5월 한 달 동안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6월 초 정식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본격 운영되면 연속지적도, 영상지도, 로드뷰, 부동산 관련 정보가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며, 부서별·업무별로 관리하는 행정정보(텍스트)를 ‘지도기반’으로 표시하는 맞춤형 활용모델이 구현된다.

아울러 도민들은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누리집으로 접속하면, 경남도 내의 부동산정보, 공동체 커뮤니티, 공공의료정보, 공유재산(일반재산) 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다.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시범구축 서비스 화면 '도로위험구역관리 서비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 Sejong-si, 30103, Korea



ISSN 2635-5140